

POLITICS

2025년 8월 20일 수요일

민주당 호남발전특위 내일 국회서 출범한다

“당세 확장·지지를 제고 힘쓸 것”

안태욱 국힘 시당위원장 취임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19일 오후 서구 힐리데이인호텔에서 지역 7곳 당협위원장 및 핵심 당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태욱 광주시당위원장(사진) 취임식과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나경원 전 대표를 비롯해 안재홍 전 의원,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 조정관 전남대 교수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나 전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안태욱 시당위원장의 취임식을 축하한다”며 “정부여당의 비정상 국정 운영과 국민과의 소통 난맥의 상황에서 힘겨운 수고하는 광주·전남 당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병소 광주·전남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지만 지역의 현안 사업 등과 관련해 앞으로 더욱 당원들 및 지역민과의 소통을 위해 정치아카데미 등을 통해 만남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안태욱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시당위원장을 맡게 돼 무척이나 감사하다”며 “당원 간담회, 민생탐방 등 현장 중심 활동을 통해 당세 확장 및 지지를 제고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 의견수렴 도정제안 접수

전남도의회(의장 김태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일부터 10월 17일까지 도민 제안을 받는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출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전남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한 사항, 예산 낭비 사례,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도민의 의견을 접수하여 상임위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제안방법은 전남도의회 누리집(www.jnassembly.go.kr)을 검색해 후 누리집 상단 ‘도민참여 →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게시판에 접속해 안내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김태균 의장은 “접수된 제안은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겠으며, 앞으로도 도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노력할 것”이라며 “제12대 후반기 전남도의회가 일 잘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11월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 제39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전남북 특위 위원 45명 인선 마쳐

11월 말까지 결과물 도출해 당에 보고

더불어민주당 상설특별위원회인 ‘호남발전특별위원회’가 21일 국회에서 맞을 올린다.

민주당 최고위원이자 호남발전특위 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9일 “광주·전남·전북 각 시도별 15명씩 총 45명 체제로 이날 오전 11시 당 대표실에서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8일 무안에 위치한 전남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남 없이는 민주당도, 민주주의역사도 존재할 수 없다. 이제 그 송고한 희생과 헌신에 표시 나게 실천으로 보답해야 할 때”라며 호남발전특위 신설 배경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전북·전남·광주 지역의 인사들이 골고루 구성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정치권·학계·시민사회를 총망라해서, 숫자는 관계없다”며 “공공의대 설립, 교통망 확충 등 호남의 숙원사업이 호남발전특위를 통해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정 대표의 이 같은 뜻에 따라 지난 11일 호남발전특별위 수석부위원장으로 광주 이병훈 전 국회의원, 전남 김성 장흥군수, 전북 이원택 국회의원을 내

정했다.

각 지역별로 15명씩 총 45명의 특위 위원 인선도 최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방송 ‘국회라이프6’에 출연해 특위 위원 인선에 대해 “현역 국회의원, 또 지방 정가에 계신 분들, 또 광역시도 연구원에 계신 분들, 또 시민단체에 속하신 분들, 또 현장에서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을 두루 망라해서 인선했다”고 밝혔다.

호남발전특위가 이끌고 갈 아젠다에 대해서 위원장은 “산업화의 차별된 부분, 소득에서의 불균형, 빈약한 교통 인프라, 교육과 의료 인프라 등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발전특위 활동 시한은 오는 11월 말까지다.

서 위원장은 “당 대표께 늦어도 11월 말까지 결과물을 보고해, 그걸 기초로 대통령과 정부에 건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지난 8일 이와 관련해 “올해 안에 호남발전특위에서 호남 발전 방향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 성과물들을 당에 보고해 주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정부와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우원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연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우 의장, 국민의힘 송연석 비상대책위원장,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대통령실, 체코 원전 수출 진상 파악 지시

강훈식, 산자부에 “국민 의구심 해소할 수 있게 하라”

여야,美업체와 ‘불공정 계약’ 논란 한목소리 질타

대통령실은 19일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불공정한 요구를 수용했다는 의혹과 관련, 진상 파악을 정부에 지시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보도 내용을 포함해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며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 국민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공공기관인 한전과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한 과정이 법과 규정에 따라 이뤄졌는지, 원칙과 절차가 다 준수됐는지에 대해 조사하도록 오전 점검 회의에서 비서실장 지시로 결정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체코에 원전

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수원·한전은 지난 1월 한국 기업이 차세대 원전을 수출하는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지원 검증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간 ‘글로벌 합의문’을 체결한 사실이 전날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합의문에는 한수원·한전 등이 원전을 수출할 때 1기당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맺고, 1기당 1억7500만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내는 조항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합의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수주를 위한 최종 계약 과정에서 나왔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전

과를 달성하기 위해 불공정한 조건을 수용하며 ‘밀저스’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산업통상자원소위원회가 19일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의 202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전체회의를 열고 한수원·한전·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문 내용을 현안으로 다뤘다.

여야는 이 합의문이 미국 측 요구를 과도하게 수용한 게 아니냐는 취지의 전날 언론 보도 내용을 거론하며 황주호 시장 등 한수원 관계자들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아무리 체코 원전 수주가 급했다더라도, 웨스팅하우스와 분쟁 해결이 선행됐어야 하더라도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또한 비밀 계약 내용이 보도된 경우 등을 놓고 산자부와 한수원을 질타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광주 ‘현금 없는 시내버스’ 안착

현금함 노선별 순차 철거...이달부터 전면 시행

계좌이체·모바일카드 대체...시민 불편 최소화

광주시는 지난 1일부터 전면 시행한 ‘현금 없는 시내버스’가 시민 불편과 혼란 없이 순조롭게 정착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현금 없는 시내버스’는 지난 4월부터 4개월에 걸쳐 전체 102개 노선 1044대 시내버스의 현금함을 순차적으로 철거한 뒤 8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실제로 지난 7월 기준 일평균 현금 또는 계좌이체 수입금은 0.3%로 시행 전인 3월 1.6%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은 일부 노선에서 현금함이 운영된 점을 고려하면 전면 시행 8월부터 계좌이체 이용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들은 교통카드가 없더라도 운전원 안내에 따른 계좌이체, 선불교통카드 구입, 정보무늬(QR) 코드 기반 모바일교통카드 발급을 통해 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광주시는 현금함 철거에 따라 연간 5억 2000만원의 유지관리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시내버스의 안전성 향상, 쾌적한 환경 조성, 수입관리 투명성 제고 등 준공영제 운영 효율화도 기대된다.

광주시는 제도 도입 전부터 철저한 준

비와 맞춤형 홍보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간 대시민 시범 운영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 5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광주시의회·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사업방향을 마련했다.

특히 어르신, 금융저신용자, 외국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금대체수단을 다양화했다.

지난 4개월간 계좌이체건수는 3만 2163건, 선불교통카드건수는 405건으로 집계됐으며, 정보무늬(QR) 코드를 활용한 모바일교통카드도 발급됐다.

또 지난 1월 도입한 ‘광주G-패스’와 연계 결제전시장, 빛고을노인타운 등에서 캠페인을 벌여 어르신 K-패스 가입건수가 2024년 12월 1689건에서 2025년 7월 8111건으로 380%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광주시는 앞으로 계좌이체 운영의 효율성과 편의성 강화를 위해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개인정보 수집·요구관리 등 운영실태 점검과 타 지자체 사례 조사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운영 절차 간소화 등 개선방안을 올해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AI 2단계 통과 환영 성명

광주시의회 “인공지능 대표도시 도약”

광주시의회는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광주의 AI 집적단지 조성사업 2단계(AI 실증밸리 조성사업) 안건이 의결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1년 동안 공들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게 됐다”며 “광주가 명실상부 ‘국가 AI 대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

다”고 말했다.

이어 “AX 실증밸리 조성은 총 6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며 “광주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인공지능 선도도시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AI 2단계 예타 면제는 광주가 쌓아온 1단계 성과를 토대로 모빌리티·에너지 산업의 혁신과, 광주를 첨단산업과

일상이 공존하는 미래형 도시, 청년들이 꿈을 펼치는 기회의 도시로 도약시키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광주시의회는 이번 결정을 광주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백년대계의 역사적 기회로 여기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향후 AI 집적단지 지정에 비롯해 AI 규제자유특구 지정,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 등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광주상의 “AI규제특구 지정 등 필요”

광주의 미래성장동력인 ‘인공지능융합(AI) 실증밸리(AI 2단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지역 경제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주상공회의소는 19일 성명을 통해 “광주시는 국가 AI 데이터센터 건립, 국내 최대 자율주행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구축, AI 인재 양성 및 기업 지원 등 다

양한 성과를 거두며 대한민국 AI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해 왔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5년간 4300억원 규모 1단계 사업을 통해 국가AI데이터센터, 대형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등 기반시설을 구축했다. 2단계는 시민들의 일상에 AI를 입히는 사업으로, 모든 시민이 AI 기술의 혜택을 체감하고 공유하는 AI 모델 구현에 중점을 두고 모빌리티와 에너지

산업 AX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광주상의는 “2단계 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국가 AI 컴퓨팅센터 유치, AI 집적단지 및 AI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이 과제들이 함께 추진될 때 광주는 진정한 대한민국 AI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기업들이 앞으로 2단계 사업을 통해 창출될 성과를 함께 나누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송대용 기자 sdw0919@